

'북한산관통도로' 합의 이후

14일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 문제에 관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의 합의서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9개월 동안 진행됐던 물리적 대립이 끝나고 불교계가 자연과 수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국책사업을 저지한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행 과정에 수많은 암초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산 문제의 완전 해결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합의문의 내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불교계의 대응 방향을 진단해 본다.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합의한 것은 3개안이다. 이중 2번째 안건으로 합의된 '8월말까지 불교계, 사업시행업자측, 환경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구체적 자료에 입각한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여 합의의 도출한다. 다만 합의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을 하며, 합의 당사자는 이에 따른다'는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만약 12월말까지 불교계와 건설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건교부가 기존의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시킨다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31개 사찰은 폐

사와 이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불교계는 이번 합의안에 묶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합의 안되면 '기존노선 강행' 우려

환경영향평가서 불교계·건설사 공유를

불암·수락산 구간 협의대상 포함시켜야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장 현응스님은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기간 내 정부, 건설업체와 함께 대

안노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석 국장도 "불교계가 무분별한 건설사업으로부터 자연과 국토를 지켜냈다"며 "불교계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적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8월말까지 발족할 조사위원회의 구성도 역시 문제다. 친환경적인 환경전문가를 발굴해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대규모 국책사업 검토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1.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와 시공사인 LG건설(주)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를 보류한다. 불교계는 북한산 터널공사 예정지역에 설치된 기도정진도량 철마선원 등을 자진 철거한다.

2. 8월말까지 불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

합의내용

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한 진지한 조사활동을 하여 합의의 도출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하고, 합의당사자는 이에 따른다.

3.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해 제기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은 8월 19일까지 취하한다.

찾기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기본조사 자료를 불교계와 건설회사가 공유하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합의가 결렬되고 건교부가 기존 노선을 고집한다면 결국 북한산 문제는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친환경적 개발공약이나 북한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얻어내 차기 정권에서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8월 9일과 10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한나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들이 제시됐다는 점은 북한산 문제

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불암산·수락산 관통도로 구간(제5공구)과 관련 문제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불암산·수락산 관통도로와 연결돼 전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불암산·수락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안노선 채택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불교계와 환경 시민단체들은 남은 4개월 동안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불암산·수락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만 북한산의 경우와 달리 사찰 피해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딜레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박태화 위원장은 누구인가



지현정사는 "박태화 위원장은 평소 말수가 없지만 남한 인사들을 항상 정감있게 대해주신다"며 "종교대표로서 위엄을 갖춘 분이기도 하지만 북한사회 의 비중있는 인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19년생으로, 본명은 박태호이다. 35년 보현사 강원 확인으로 입찰하여 출가했다. 법명은 학림, 41년 백운사

북한불교 최고지도자... 보현사서 출가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차 방한한 박태화(사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불교계 최고 지도자이다. 이뿐 아니라 조선종교인협의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북한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주석단에 있는 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한 진각종

와 52년 보현사에서 수행했다. 박 위원장은 58년 인민경제대학 국가건설대학부 졸업하고 59년 불교도연맹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70년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79년 5월 5일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

8·15합동법회 왜 반쪽행사 됐나

정부, 외부행사 자제요청... 北대표 참석 안해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8·15 남북합동법회가 북측인사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고 남쪽인사만 참가한 반쪽행사로 봉행됐다. 이는 2002년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태화(사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초로 개최된 조계사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북대표단 외부행사 자제입금이 강하게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주체 측은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종단협과 조계종은 이번 합동법회에 박 위원장을 조별연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민족통일대회 주체 측인 민화협 등 단체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합동법회

계획은 없었다"고 밝혀 불교계와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박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민족통일대회에 불교계 대표로 참가한 한 스님은 "이번 2002년 민족통일대회가 '만남' 이외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행사였다"며 "7대 종단이 단체위주의 민화협 통일연대 등과 행사를 같이하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계사 합동법회가 반쪽 행사로 열린 것은 결국 당국이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정치적 색깔이 나오지 않는 법회에 까지 참석 못하게 하면서 벌어진 일로 분석된다. 또 7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등의 불협화음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진각종 추진 배경=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뒤지고 있는 군포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종단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따라서 위덕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학교법인 설립 종단으로서 불교학과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위덕대와 종단의 군승 지정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왜 반대하나= 조계종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계종 승려 외에 다른 종단이 군승을 파송할 경우 교리나 의식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30년 넘게 가꿔놓은 군포교 현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진각종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군인사법상 '정사(조계종 비구 개념)의 진각종 승승'는 군종장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군 포교 기득권의 일부분을 진각종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인식이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

이견

위덕대 군종사관후보대학 지정 문제

7월말 진각종이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청원하는 공문을 조계종과 국방부에 발송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위덕대학 법인설립 주체인 진각종과 조계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서기 382호 2면 기사 참조>. 양측의 입장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본다.

진각종 법률적인 문제없고 군포교 위해 필요

조계종 승적·교리 다를 경우 혼란초래 소지

석도 나오고 있다.

●논점은 무엇인가= 두 종단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 문제는 승적문제, 서로 다른 교리와 의식, 진각종의 군포교 기여 여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승적 문제다.

진각종이 요구하는 것은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과 진각종의 군승 파송 종단 지정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위덕대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은 불교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군승으로 파견되는 것이고, 진각종을 군승 종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승적문제로 군승활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진각종 승적을 가진 위덕대 졸업생의 군승임용이 가능해지며, 진각종이 바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조계종은 위덕대 지정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96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군승 자격요건을 조계종

승려로 못 박고 있다. 이는 위덕대 지정은 검토 가능하나, 진각종을 군승지정종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승적문제 외에 진각종이 군승에 한해 조계종의 의식과 교리를 따르겠다는 것이나 최근 몇 년 새 군포교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률적 문제는 없는가= 현행 군인사법 제12조에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신부·승려로 명시하고 있고 병역법 제58조에서도 군

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이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진각종 '정사'가 승려에 포함되는가이다.

조계종은 '정사'를 일반적 개념의 승려로 볼 수 없으며, 원불교의 교수가 군승으로 파송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각종은 종단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이상 '정사'도 승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종단협 일원이 아닌 원불교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망= 진각종은 교계 여론이 유리한 만큼 조계종과 최대한 협의를 하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군승 지정 승인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국방부가 조계종의 논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상 독자적으로라도 군승 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조계종과 진각종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 급명간 조계종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전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종단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현 옮김 | 신국판 변형 | 값 8,900원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 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우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지식도 없는 순수한 연인으로 삶의 변론,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수 있는 특별한 조언들을 담았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뜨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실이 담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돈정아출판사
www.chung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